

국가교육위원회 제61차 회의록

1. 회의개요

- ① 일 시 : 2025년 10월 23일 (금) 15:00 ~ 17:35
- ②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413호)
- ③ 출석위원 : (위원장) 차정인
(위원) 강은희, 김 건, 김성천, 김주성, 손덕제,
양오봉, 연취현, 유민봉, 장신호
(총 10인)

2.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 재적위원 12인 중 10인 출석으로 성원

② 개회 및 모두말씀

- (위원장) 지금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제6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 반갑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목요일에 회의를 하게 되는데 좀 편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이 두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모든 논의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회의록도 실명을 포함한 속기록으로 국민께 모두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첫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 12월 23일입니다. 그 사이에 국교위의 제도와 관행, 운영방식을 혁신해서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혁신의 내용은 결

국 우리 업무 충실성 강화, 수준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3건의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사항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교학점제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모니터링단의 조사, 현장조사, 연구센터의 긴급연구 등 4개의 트랙을 충실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지금 시간이 그리 많이 없고, 그러면서도 줄속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논의의 충실성과 최단기 지혜 집중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해결 방안,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회의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그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논의 결과가 나중에 본회의에 다 올라오면 그때쯤 되면 훌륭한 지혜들이 모아져서 해결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4개의 트랙을 운영하고 본회의에서는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또 하나의 안건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2기 위원 추가 위촉(안)인데 많은 검토를 거쳐서 다섯 분을 추가 위촉하기로 하고 안건을 올릴 것입니다.
- 그다음 세 번째 안건은 지난번 위원회에서 특위 분야를 의결해주셨던 5개 특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추가로 4개 특위에 대해서 또 구성하는 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결국 국민의 높은 지혜를 가장 효율적으로 모아내는 그런 일이 우리의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화요일에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의원들께서 본회의와 전

문위, 특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있었고, 또 국교위가 하고자 하는 특위 분야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특히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다들 갈급한 마음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교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깨가 되게 무거웠고요. 그때의 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제가 믿을 것은 위원님들밖에 없습니다. 각급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지혜를 다해 주시고 진정성을 다해 주셔야만 겨우 한국교육의 많은 난제들을 조금이나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셔서 찬반 의견만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회의 내용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회의에 내용적으로 기여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코 위원 한 분의 역할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 언론에서 취재하러 많이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언론에서 의견도 내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③ 안전 등 공개 여부 결정

- (심의·의결안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접수번호 제2025-1호) 진행 여부’ 공개
- (심의·의결안전)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추가 위촉(안)’ 공개
- (심의·의결안전) ‘2025년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현황 및 추가 구성 분야(안)’ 공개

4 활동 보고

- (간사) 지난 회의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활동에 관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지난 제60차 회의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6차에서 8차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6일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개정 진행 여부를 사전 검토하기 위해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가 두 차례의 온라인 회의와 한 차례의 대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6차 회의는 10월 1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요. 제7차 회의는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에 대회의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차 회의가 10월 20일 월요일에 4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 6차 회의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출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사전검토 절차를 먼저 안내해 드렸고요. 7차 대면회의에서 진행 여부를 교육부 담당자가 참석해서 함께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차 회의에서는 추가 논의 및 사전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 다음은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도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4시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참여위원회 개선방안과 국민 의견수렴 플랫폼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 국민참여 및 의견수렴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수렴 절차도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서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전 온라인 설명회가 2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주요 활동 역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제3차에서 5차, 세 차례의 공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제4차 회의는 10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제5차 회의가 10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세 차례의 공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공교육의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과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고교학점제, 학생평가, 사교육, 혁신교육뿐만 아니라 자사고, 대학입시, 직업교육 논의 등 광범위한 공교육 부분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여서 해당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가교육과정 관련 주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26일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난 60차 회의에서 사무처장의 활동 보고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부터는 내부 검토과정을 정립해서 이번 회의부터는 제가 사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방금 사무처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심의·의결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⑤ 주요 내용

- 가. (심의·의결안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사항(접수번호 제2025-1호) 진행 여부
- (간사) 심의·의결안건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사항 진행

여부입니다. 안전과 관련한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보고를 위해서 성열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장께서 참석하셨고, 안전 추가 설명을 위해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도 참석해주셨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정책과장이 안전을 보고드리고, 이후 전문위원회와 교육부에서 설명을 이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회와 교육부는 설명과 질의응답이 끝나면 이석해 주시고 이후 본회의 심의를 하시고 의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의 안전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자)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진행 여부 심의·의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12쪽입니다. 교육부는 9월 26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완화 관련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고교학점제의 고교학점 이수 기준 사항과 교육부가 지침으로 공지한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성취수준보장 지도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도록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교육과정 총론 책자와 해당 지침 전문을 별지 자료로 드렸습니다. 국가교육과정 개정 절차는 개정의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결부터 하도록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요청 접수 직후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 전문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모니터링단은 검토 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하고 단원들의 의견서를 수합·정리하여 검토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결과는 잠시 후 성열관 위원장님께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모니터링단은 다수 단원이 동 교육과정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붙임 3에 결과보고서 전문을 드렸습니다.
- 전문위원회 사전검토와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늘 위

원회에서 심의하실 사항은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사항의 진행 여부입니다. 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 안전에 대하여 수립·변경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하실 경우 관련 개정의 추진계획안을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의 검토 절차를 거쳐 안전 논의하시도록 향후 일정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자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1은 개정 관련 절차와 법령, 그리고 붙임2와 3은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의 검토결과보고서, 그다음에 붙임4는 교육부의 개정요청서와 고교학점제 개선대책을 함께 드렸습니다. 이상 제 보고를 마치고, 전문위원회 사전검토에 대해서는 성열관 전문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저희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현장의 교사들과 관련 분야 교수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지금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 속에 있고, 어떤 결정이 나는가에 따라서 학생들의 삶과 교사들의 교육적인 행위, 나아가서는 학부모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17페이지 검토 결과를 제가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본 전문위원회는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완화 관련 교육부의 개정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완화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 여부 사전검토 결과, 교육부가 요청한 수립·변경 필요성에 대해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검토 요청을 받아 들일 필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위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후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서 소수의견을 아우르는 최선의 정책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 17페이지 하단에 아시겠지만 이것이 사실 간단합니다. 그동안에는 3분의 2만 출석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는데 성취율, 그러니까 미이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이수를 둔 것은 점수가 낮으면 고등학교 졸업을 안 시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든 미이수 학생들을 도와줘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1, 2가 있는데 본회의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변경 요청을 수용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논거는 학점이수 관련 미도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지도 등에 있어서 사실상 현장의 형식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미이수 학생을 막기 위한 편법으로 비교육적인 행위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출석률 기준을 충족했으나 2년 반 후에 학점이 부족해서 고등학교에서 낙제하는 학생들이 생길 시 교육적,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많은 현장교사들이 보고하듯이 학점이수 기준 미도달에 따른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6학기 중에 이번 1학기를 한 번 해 본 상태입니다. 또 보충수업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각종 서류 작성 등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해 봤더니 많은 교사들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학교의 문화가 바뀌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국민과의 약속인데 실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이것을 바로 변경하기보다는 지원정책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출석률만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성취수준보장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나타난 문제는 총론 개정 없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위 최성보라고 하는 정책을 포기한다

면 고교학점제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소 길지만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배경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고자) 교육부에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올해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확대되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관심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진로 및 과목 선택의 어려움, 출결 처리로 인한 혼란, 최소성취수준보장 지도로 인한 부담 등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등 여러 차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을 시급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은 회의자료 28쪽부터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책 과제 중 학점이수 기준의 완화는 교육과정 개정사항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여 교육과정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취지, 현장 수용성을 고려하여 공통과목은 현행 유지하되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심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학점이수 기준의 완화가 2026학년도 학사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은희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정·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의 기준안이 현재 최소성취수준이 상당히 완화된 상황에서 지금 2학기 적용이 교육부장관 규정 개정으로 적용 가능한 것은 최소성취수준보장 이수가 안 되었을 때 기존에 5시간 했던 것을 3시간으로 하는 것은 교육부장관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예, 가능하고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 (강은희 위원) 그래서 1학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부분은 상당 부분 수정이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싶은 것이 교육부에서 25년 올해 9월에 전체 생기부에 적는 숫자를 500자 이내로 하는 규정을 개정했는데 그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500자로 다시 고치면 올해는 이미 1학기에 대부분이 500자로 완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학기에 다시 500자로 맞추려면 1학기에 생활기록부 다 기록해 놓은 500자를 다시 250자로 줄이고 2학기에 또 250자를 맞추는 과정을 하게 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1, 2학기 다 합쳐서 올해는 그 부분을 700자 정도로, 올해에 한해서 생기부 기록하는 글자 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교육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학기에 500자 다 기록한 것을 250자로 줄이는 작업도 현장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은 대부분 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다음에 두 가지 문제인데요. 최소성취수준보장을 하느냐 마느냐는 부분인데 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100% 찬성인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 192단위에서 최소성취수준보장을 하는 고교학점제에서 1학년 때 대부분 이수하는 공통교과가 국·영·수·사·과, 한국사 정도가 있습니다. 이 과목만큼은 최소성취수준보장을 그

대로 유지하자, 나머지 2, 3학년에 주로 배우는 일반선택이나 진로선택, 융합선택은 우선 공통교과에 대해서 최소성취수준보장을 유지하면서 점차 확대되어 가는 쪽으로 발전적으로 진화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주된 의견이기는 합니다. 물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00%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3분의 2가 넘는 동의 수준으로 대부분 동의를 하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진로선택의 모든 교과를 최소성취수준보장으로 해야 된다는 교육청도 있기는 합니다. 출결만 해야 된다는 일부 교육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최소성취수준이 상당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1학기와 같은 정도의 혼란은 이미 한번 교과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인 기본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그 개념에서 최소성취수준보장은 그대로 공통교과라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한 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다과목 교사도 있기는 하나 실제로 2학년은 또 최성보가 안 되고 실제 최성보를 지도하는 것은 1학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담도 사실 공통교과만 하게 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낙인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최성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를 중퇴한다든가 이것은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면 실제로 정말 염려할 정도의 숫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 교육청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성보를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쉽게 낸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난이도 조정을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어쨌든 출제를 할 때 난이도 조정도 정상 분포 곡선에 가깝게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A에서 E등급까지 했을 때 E등급이 안 되는 과외 등급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최성보를 유지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으나 우리가 추구

해야 될 가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전문위원회나 여러 교원단체에서 하는 비교육적 행위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전혀 없지 않기는 합시다라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기초학력이 미달된 아이들은 다른 수단과 모든 교육을 동원해서 우리가 교육적 지도를 해 왔지만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또 따라가지도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방안이 그동안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가 또 국가책임 교육을 완성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제가 논의를 개시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제출한 고교학점제 案에 대한 찬반의견이라든지 심층적인 토론을 지금 시작하면 다들 또 발언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까지는 아니지요? 그래서 다들 고교학점제에 대한 찬반의견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논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손덕제 위원님이 발언을 시작하실 텐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간략한 요지의 발언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을 조금 남겨두시지요. 조금 남겨두시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도 빠뜨림 없이 검토하고 최상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 4개의 트랙을 선행합니다. 그것을 잘 지켜보시고 거기서 잘 정리된 의견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논의를 제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손덕제 위원님도 간략한 요지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다 언급해 주셨는데 강은희 위원님 말씀은 좋았습니다.
- (손덕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 선생님의 대표로 유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며칠 동안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현장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그 자료를 요약한 것을 빠르게 읽어드리고 제 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말씀을 드리기 전에 案으로 나온 1, 2번 중에 저희들은 두 번째에 있는 출석률로만 진행하는 것이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 뭔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하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25페이지에 보시면 교총, 교사, 전교조 공통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도의 핵심이 미이수제는 교사의 78%가 전면 폐지를 요구했으며, 최성보 지도를 경험한 교사의 97%는 학생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우선은 고등학생들이 대학입시가 바뀌기 전에는 고교학점제에서 미리 선택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 결국은 학생 진로보다 대학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고 진로에 맞는 과목보다는 등급 잘 받는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학생들은 선택과목 연계에서도 어떤 것을 연계해서 가야 될지 실제로 컨설팅을 받아서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리고 진로보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한 교사가 2~5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전문성이 그만큼 확보가 될 것인가 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우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바뀌게 되면 학생의 휴식시간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지금 핵심인 최성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교위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교위 위원장님이 바뀌시면서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많이 경청해서 현장의 의견이 수용되는 그런 국교위로 거듭나 주기를 많은 선생님들이 기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최성보와 관련된 난이도 기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평가의 수준이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가장 명문학교인 H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95% 이하의 학생들이 가는 D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학교 중 명문학교에서는 국어 과목에서 미이수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학력이 낮은 학교에서는 국어 과목에서 미이수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면 미이수자 학생이 나오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보다 열등한 가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이 기준에 어떤 명확함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이 나오게 되면 선생님들은 ‘나는 무능한 교사인가? 나한테 왜 이렇게 미이수자가 나왔지?’ 이렇게 하면서 이수자에 맞추게 되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수행평가 비율을 늘리고 시험문제를 쉽게 내는 파행적인 문제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이수자 학생 성적 처리가 늦어져서 유학 가는 학생의 성적 처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생겼다는 그런 학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졸업 및 유급과 연계가 됨으로써 결국은 학업중단율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전에는 출결로만 해서 졸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미이수가 뜨면 이것까지 해서는 못 하겠다고 이렇게 포기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의 이야기들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론적으로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을 더욱더 북돋아주고 또 끌어올려줘야 되지만 실제로 미이수자 아이들에게 5시간 하는 것을 3시간 해 준다, 그리고 보충수업 하는 선생님에게 돈을 준다, 이런 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 보니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효과가 없었어요. 97% 선생님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상이한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런 기준을 맞춰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도 의논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학생들의 낙인효과라든지, 또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력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학부모님 입장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500자를 250자로 줄이는 것도 사실 1학기 전이나 8월까지만이라도 했으면 선생님들이 좀 나왔을 것인데 지금 공문으로 내려와서 선생님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합니다. 고칠 것 다 고쳤는데 지금 또 700자로 늘리라고 하면 아마 욕 다시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내려가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이 시기를 놓치고 내년엔 시작되고 난 다음에 뭔가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은희 위원님이 조금 빠르게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의견이 잘 모아져서 현장성 있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금 성열관 위원장님과 김천홍 국장님은 계속 계셔야 되나요?
- (보고자) 질의응답 사항이 있으시면 계시고 질의응답 사항이 없으시면 논의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유민봉 위원) 질의응답입니다.
- (보고자) 예.
- (유민봉 위원) 김천홍 과장님이 발표하시면서 적기에 이것이 심의·의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적기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서 제안드린 대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면 이 내용은 저희가 판단할 때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늦어도 올해 말 또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까지의 교육과정 개정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김성천 위원) 저도 일단 이번에 교육과정 개정안을 다루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현장의 의견들도 수용하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1안이냐 2안이냐를 논의하기 이전에 아마도 고교학점제가 정착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또 새롭게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3자의 경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를 아울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냥 교육부가 준 1안, 2안에 갇혀서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들을 넘어서는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미래 교육방향을 만들어나가는 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실은 이번에 한 학기를 해 보고 나니까 0.6% 정도의 아이들이 어쨌든 학업에도 문제가 있고 아예 출석도 하지 않는 이런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결국 한 0.6% 정도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민낯들이 좀 드러난 면들이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냥 출석을 가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밥만 먹고 학교에 가고 3분의 2만 배우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점이라는 질적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덮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 교육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다음 단계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렇게 보면 이 아이들이 한 2~3%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하셔서 0.6%로 떨어뜨렸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에서 0.6% 되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들을 별도로 마련해 나가는 것들이 맞는 것인데 이 아이들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제 다시 옛날로 돌리자, 단위제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은 어찌 보면 교육과정이 퇴행될 수 있는 면들이 있어서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 물론 이 案들을 다 수용하면, 예컨대 성취율을 보지 말고 출석률로만 가자고 했었을 때 딜레마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원단체의 비판이나 저항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또 사실상 예전의 교육과정으로 회귀를 하거나 아니면 제도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든지, 또 성취율을 없앤 상태에서 과연 내신 절대평가로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내신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는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하나는 학점제가 잘 되기 위한 조건, 만약에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면 잘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어떤 논의들, 진로와 융합 절대평가라든지 수능 절대평가, 교원 증원이라든지 교육청 지원 기능의 강화라는 이런 시스템들을 하나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두 번째로는 만약에 출석률로만 가자고 하는 이 방식이 아니라 원래 학점제의 취지대로 간다고 그러면 성취율을 보되 제3의 경로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점이수 기준에서 졸업 기준을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두 과목 정도 이수를 못 했다고 해서 이것이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도 일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한두 과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서로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놓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그런데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40%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20~40% 정도로 해서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자율조정을 해 나가고 나중에 공시정보에다가는 대신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것을 맞췄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방식들을 또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 아예 출석률로만 가자는 것보다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단계적으로 20에서부

터 서서히 올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몇 년의 어떤 고민 속에 우리 안에서 축적의 시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20% 정도로 낮췄다고 한다면 기초·기본학력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을 이수한 아이들에게 학점을 부여해 준 것으로 대체를 해 주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일정하게 현장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중에 2,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학점을 못 따는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학점은 행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설정해서 평생교육원도 될 수 있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학교도 마찬가지이지요. 블렌디드 프로그램도 일정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미이수된 과목만큼 학생들이 그런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수료 상태에서 그 과목을 더 일정하게 들으면 학점으로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우리가 결국 전문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느냐 마느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말로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어떤 제도, 경로에 대해서 저희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안과 2안을 열어놓고 우리가 논의를 하되 갈 수 있는 방향, 조건 그리고 이후에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까지도 저희가 함께 정교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연취현 위원님.

- (연취현 위원) 저도 말씀드리면 저는 학부모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실험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지 말아주시라, 대안을 만드시겠다면서 너무 불안하게 하셨다, 그리고 빨리 무슨 대안을 마련해 주시지 않을 것이면 이 불안감은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국교위에서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 아이들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한데 이상적인 학습에 대한 실험이 우리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주어지고 있고 지금 고교학점제를 맞닥뜨린 아이들은 당장 나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한편에서는 학교를 졸업만하기를 원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은 학교를 벗어나기 위한 구실로 고교학점제가 작용하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두 가지 현실을 같이 아우르는 제도를 더 많이 고민해서 아이들에게 적용했어야 되는데 저도 오늘 다른 학부모들과 얘기하면서 특히 저 같은 워킹맘들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이 되었는데 사교육 아니고서는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일단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개선하느냐를 장기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은 아닌가, 일단 현장의 불안감을 잠재운 상태에서 논의를 현실적으로 이어가면서 이상적인 논의를 어떻게 현실화할지 디테일한 복안을 가지고 그다음 스텝을 밟아야지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조금 문제점을 줄이고자 하면 결국 우리 교육이 망하게 되는 것 아닌가, 현장의 문제점을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국교위에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성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1안, 2안 정도에서 우리가 표결하거나 선택하는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신호 위원님.
- (장신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아쉬운 점은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시범 적용된 지 꽤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시범 적용을 했고 또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미래 진로와 열린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이론이 실제로 적용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어려워하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급한 문제 상황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실재는 학교 현장에 있고, 또 교육은 이상과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성천 위원님, 강은희 위원님의 좋은 이론에 대한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실제로 적용을 해 보니까 지난 학기에 이렇게 부작용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정책이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또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워한다고 하면 아까 김성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선생님들이 바라시는 바도 좀 들어드리고, 그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은 보완해 주고, 그것을 지금 시작해서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려고 하면 학교는 계속 기다려야 되고 계속 어려움을 또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경청을 하시면서 보완책,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정책은 지속적으로 계속 갖추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건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 (김건 위원)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나오면서 지금까지 봤던 교육정책 중 당사자들이 이렇게 단체로 ‘이것은 폐지해 주세요.’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을 모아서 한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성보 문제를 논의하고는 있지만 고교학점제의 의도와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넓히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사실 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선택권이 그렇게 자유롭게 주어지지도 않고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실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다 부여하려면 결국에는 대학에 준하는 정도의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그 실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택권 같은 경우도 시간표를 자유롭게 짤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 고등학교 시간표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다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1교시에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이 한 3개에서 5개 사이일 것이고, 그러니까 50개의 과목 중에서 5~6개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짜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선택지 안에서 제한된 선택지로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설턴트들이 당연히 성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선택권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고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이 선택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고 했을 때 바꿀 기회가 과연 주어질까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대학교는 무전공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2학년까지 다양한 강의들을 수강한 이후에 내 적성과 전공은 이것이 맞다고 결정하는 것이 점점 대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지금 현실에서 맞닥뜨린 것은 이것과 정확히 역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하나를 골라서 이것을 설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대입 전형에 넣는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의 선택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모든 진로를 다 결정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상적인 제도라면 결국에는 변경할 기회, 수정할 기회도 주어진다고,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학생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발이라면 반발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물을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다 생물을 들으러 가다 보니까 생물을 들으면 도저히 성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 과목으로 바꾸는 친구들도 있고, 나는 천문학, 물리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물리 과목을 듣고 싶은데 학교에 물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없어서 12명도 물리를 신청하지 않아서 물리 과목이 폐강이 된다면 내 진로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성보 관련해서 굳이 1안과 2안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2안이 그나마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고교학점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 말고도 평가와 같이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성취평가제가 안착이 되어야 하고 대학입학이라든가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도 절대평가와 같이 가야 되는 제도다, 이것은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를 이렇게 도입해 놓고 나중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이렇게 가면 결국 지금의 평가체제 하에서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가 이미 반년 동안 진행된 것처럼 크게 왜곡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절대평가 그리고 대입제도가 완전히 이런 고교학점제의 원래 취지와 의도 그리고 그 이상에 맞게 되기까지의 평가제도와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다시 고교학점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최성보 도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오봉 위원님.

- (양오봉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 총장으로서 학점제를 운영하고 또 무전공제 그다음에 전학·전과를 거의 100% 허용하는 제도로 지금 대학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이 고교학점제를 받아들일 때 가장 지금 제도와 차이가 없는 순서부터 이렇게 마일드하게 가야지 너무 이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어렵게 되면 선생님들, 학생들 또 국민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도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 이전의 교육과정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서 정말 최소성취수준보장 지도까지 가려면 그래도 한 5년 정도 시행해 보고 이것을 약간씩 보완하는 그런 정도로 교육과정이 진보화되어야지 너무 이상적으로 이것이 대학 정도 수준으로 벌써 고교학점제가 가면 저는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시행하는 데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또 저항이 있으면 이 제도가 안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과 도입해서 1단계만 진행해 보면, 그리고 일정 단계를 지나면서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하면 또 그다음에 그것을 보완하는 단계로 점차적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 (강은희 위원)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에서 가장 요청하는 것이 절대평가인데요. 저는 이것이 최소성취수준보장에서 얘기하는 E등급이 안 되는 절대평가에 대해서 공통의 교감이 없다는 것은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5등급, A, B, C, D, E등급이 있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최성보가 안 되는 것인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내신 절대평가를 그렇게 원하면서 E등급이 되지 않는 기준을 정하지 못한다, 저는 이것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해서 사실 올해부터 학점제에 해당이 된다고 발표를 한 것뿐이지 사실은 작년에 교육과정 운영한 것에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최성보와 출석 인정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것 때문에 달라진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육과정 심의할 때도 아시겠지만 공통교과,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교과가 오히려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분석을 아주 세부적으로 해 보면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다과목이 되었다, 현장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가 형성된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 그러면 왜 이렇게 혼란이 되느냐, 고교학점제 본 취지를 살리려면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절대평가 E등급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도 아직 못 잡고 있는데 과연 절대평가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가, 저는 정말 그것이 더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최소성취수준보장 자료라고 교육부에서 모든 교과마다 다 나와서 성취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 준 겁니다.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런 논의를 하려면 여기의 어느 기준이 도달이 못 되는지 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기준도 다 마련되어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교육청별, 저희 교육청은 없는 교과는 또 다시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리만 하면 E등급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어떤 수준으로 정리가 되는지, 여기에 보면 최성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적용할 때 뭐가 안 되는지를 조금 더 세분해서 정리하면 되고요.
- 오늘 논의하는 출결과 최성보를 공통으로 할 것이냐, and로 할 것이냐, or로 할 것이냐, 이것은 현장에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과목에 대한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고등학교에서 다과목을 해야 되느냐,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원 취지는 기본소양과 기본적인 학력이 달성이 되되 아이들의 선택권을 조금 넓혀주는 수준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면 공통교과는 학년제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너무

학점제로 자르다 보니까 학기제로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가야 되는데 매우 이상적인 교육과정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어느 수준 이상까지 해 왔고, 다만 정말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의 다과목이 필요하냐 아니면 기초소양을 좀 더 튼튼히 해서 과목수를 줄이되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선택권 다양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기본학력이 살짝 뒤로 간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고등학교 수준의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천 위원) 저도 사실은 일종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공포 마케팅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이 거의 괴담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인데요.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 때문에 자퇴율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식의 워딩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실제로 분석 결과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하나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 그다음에 진로를 완전히 고1 때부터 세팅을 해서 가야 되고 픽스된 것처럼 하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고1 때는 이미 공통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때는 선택과정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요. 2, 3학년 때 가야 되는데, 안에서는 이미 일반선택에 수능과목이라는 것들이 깔려 있고 학교의 여건상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문과와 이과 이런 것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 교과군 안에서 좀 더 들을 수 있는 선택지를 주고 있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과정으로 일정하게 풀어나가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진로를 변경했을 때 엄청난 페널티가 있느냐, 이미 많은 입학사정관들이 그렇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로의 일관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목을 들어냈던 과정 안에서 아이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태도나 자세, 성취기준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진로 변경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본다는 겁니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의 선택 권장 과목이라는 것이 좀 있는데 그 과목에 대해서는 범위를 주는 방식으로 나가서 특히 공대라든지 이런 데가 적어도 이 정도 과목은 듣고 들어와야 대학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권장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저는 교육과정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고교학점제라는 개념은 1957년도에 오천석 선생님의 책에서 이미 그 개념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1차, 2차 교육과정 안에서 ‘선택’이라는 이야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일정하게 교육과정이 계속 개편되어오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어떤 주도성이라든지 과목 다양화 이런 면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궤적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지금 만들어왔었던 과정에 있는 지점인데 저는 얼마든지 대안들을 만들어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번 토론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 (보고자) 그러면 교육부와 전문위 위원장님은 이석을 하시고 그 다음 절차로 논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장 퇴장)

- (위원장) 내용에 깊이 들어가는 논의를 하다가 절제를 하고 마무리를 급하게 지었는데요. 오늘 의제 자체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이지요?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서를 낭독해야 되니까 주문서를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주문 : 교육부 요청사항,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관련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수립·변경을 진행한다.

(의 사 봉 3 타)

나. (심의·의결안건)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추가 위촉(안)

- (간사) 의결하시는 동안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심의·의결안건인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추가 위촉(안)에 대해서 교육과정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자) 자료집 46쪽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추가 위촉(안)을 보고드립니다. 국교위 법령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정책 사무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 역할을 수행하고 4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 위원으로 우선 40명이 위촉되어 운영 중이고, 5명을 추가 위촉하여 전문위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 5명의 명단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동 안건이 의결되면 해당 위원들의 위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건 보고에 이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취현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비상임위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전문위 위원들 위촉하실 때 위원장님과 양쪽 상임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전문위원님들을 위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님이 양쪽 다 공석이신 상태에서 위원들의 전문성 문제가 아니고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 지금 상임위원님들이 안 계시고요. 지금은 전문위원들을 추천해야 되는 상황이고 법상 제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이 없더라도 과거에는 여기 본회의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수렴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회의 위원 소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의견은 지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이미 많은 인재 풀(pool)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항목별 요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업계군 두 분이어야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선택의 풀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案을 올리는 것이니까 심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보고자) 참고로 지금 현재 5인 중 3인은 연임입니다. 1기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 (강은희 위원) 지금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요?
- (보고자) 예. 1기였는데 40명을 위촉할 때 같이 위촉이 안 되었던 상황입니다.
- (강은희 위원) 왜냐하면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현장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알고 전문위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그런 점을 충분히 다 고려했습니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것이 이렇게 급한 겁니까? 상임위원이 위촉된 이후에,
- (위원장) 급한 겁니다.
- (김주성 위원) 급합니까?
- (위원장) 지금 바로 고교학점제 논의를 하게 되는 전문위원입니다.
- (김주성 위원) 고교학점제 때문에 급한 겁니까?

- (위원장) 그렇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빨리 충원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고교학점제 논의가 빠를수록 좋은데 늦어도 12월경까지 마치려고 하면 지금 빨리 충원이 되어야만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전문위원회에 위촉된 분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 (보고자) 40명입니다.
- (김주성 위원) 40명인데 5명이 이렇게 급하게 필요합니까?
- (보고자) 분야별로 필요한 전공이나 이런 분들이 없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렇게 지금 면면을 보시면,
- (김주성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들을 거쳐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깊은 논의 속에서 올라오면 우리들이 조금 더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상임위원들과 깊이 논의를 안하시고 이렇게 올라오니깐 우리 본회의 입장에서는 좀 더 탄탄한 논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느낌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급하다면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40명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위원장)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인사 절차상 상임위원 임명이 언제 될지 모르는 측면이 있어서 상임위원 임명 날짜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상임위원 두 분 중 한 분은 추천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곧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다리겠지만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 (유민봉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는 독임제 장관 부처가 아니고 위원회 형태의 정부기관입니다. 위원회 정부기관의 위원 구성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고, 또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강조하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40

명이 계시고 다섯 분을 추가로 해서 45명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40명 중에서 결원이 생겨서 다시 40명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담당자께서,

- (보고자) 지난번 6월 30일에 2기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촉을 의결하셨고 그 당시에 아마 우선 40명을 위촉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45명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최대한 저희가 법적으로 4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어서 1기도 45명을 구성했었고요. 그런데 우선 40명을 한다고 그때 6월 30일에 보고드리고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 (유민봉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5명의 그 차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시급한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득을 할 부분이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발표할 그런 성질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40명과 45명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섯 분을 이렇게 추천하신다면 분명히 실무선에서는 여러 기준들을 고려해서 여기 추천 명단에 올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추천 과정이 저희들과 공유가 되었을 때 이래서 이쪽 분야는 연임이 되었구나, 또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여기에 추천했구나, 이 과정이 저희들과 공유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다섯 분 좋습니다.’ 아니면 ‘다섯 분 중에서 이런 분야는 부족하네 이런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과거에는 상임위원 두 분이 있어서 실제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 소통과정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들과 지금 어떤 인식의 갭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 특별위원회 구성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의 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임위원 두 분이 빨리 임명이 되어서 내부 소통과 조율과정이 빨리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은 대체로 저희들과는 길게 논의할 그런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오봉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워낙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시급한 현안들도 있고, 또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가능한데 상임위원 두 분이 있더라도 결국은 위원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의결되면 그 과정은 오히려 전체 위원회의 의결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원이 그중에 또 한 분만 만약에 위촉될 경우 두 분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서는 전문위원이 40명이지만 세 분은 또 연임이고, 제가 보기에 이분들의 구성이 성비 구성도 잘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여기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유민봉 위원) 조직을 책임지는 위원장님의 결심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충분한 정보의 공유, 그리고 또 이제는 공개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명단이 저희들한테 통보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다섯 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존에 위원분들이 누구이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가 이러이러하고,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이 다섯 분들이 채움으로써 훨씬 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 자문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야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강은희 위원) 간단하게 지금 40명의 전문위원들이 지난번에도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보가 좀 부족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쨌든 교육과정이 유·초·중등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의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저는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교육과정 전문위원들이 이 다섯 분 중에 누구였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닐 드림슨 이분은 외국인 같아 보였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 교육과정에 대

한 이해가 괜찮은지,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매우 중요한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말씀드립니다.

- (보고자) 우선은 1기 교육과정 전문위원회가 구성될 때부터 45명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큰 방향과 인원 배정 이런 부분들을 고심해서 1기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의 총론, 그리고 학교를 고려해서 인원이 배정되었고 교과도 고려해서 인원 배정을 했었고, 그리고 교육과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이나 교육공학 또는 교수학습, 평가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로 해서 교육 일반 부분도 좀 모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학교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어서 사회적인 관점을 가지고 같이 봐주시는 분들도 적지만 참여하시도록 이렇게 구성 배분이 됐었고요. 1기의 구성 배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40명으로 위축하면서 5명이 빠진 부분을 이번에 보충해서 위축하는 겁니다.
- 그래서 지금 다섯 분 중에 김현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교육공학 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1기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연임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의 이강은 교감선생님은 전문교과, 특성화고 쪽 영역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요. 이수정 박사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계셔서 같이 특성화고 전문교과 쪽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5번의 이주연 박사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수업평가 쪽의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5번 이주연 박사는 신규로 저희가 위촉안을 드렸고요. 닐 드림슨 교수는 지금 재외동포로서 한국에 있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기술사회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이분이 전공은 기술사회학 쪽이고 산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저희 국가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관련 연구에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고, 또 인천교육청에서 4차 산업혁명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산업이나 열려 있는 부분까지 같이

봐줄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안을 드렸습니다.

- (강은희 위원) 한국어는 익숙한가요?
- (보고자) 예,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위촉된 위원들의 정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전문위원을 구성하실 때 깊은 논의와 검토들을 거치셔야 되는데 지금은 상임위원들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사무처와 위원장님이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 굉장히 급하게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 2기 전문위원의 임기가 27년 6월이지 않습니까? 25년에서,
- (보고자) 25년 6월 29일까지입니다. 2기가 이미 시작,
- (김주성 위원) 아니, 지금 2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보고자) 2기가 6월 30일에 시작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시작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5명이 그렇게 급하느냐는 것이지요.
-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지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 (김주성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위원장님이 결심하셨다고 해서 동의만을 원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불안해하거나 위원장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데 좀 더 좋은 결론을 내실 것 같으면 저희들의 제안도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 임명 날짜가 예정되지 않고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임위원과의 추천 절차 논의를 위해서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논의를 주로 하게 되는 책임 전문위원회가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문제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서 충원이 충분히 되는 것이 더 바람직

하고요.

-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논의는 오늘 강은희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갔듯이 위원으로 추천된 다섯 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한 분 한 분 인적사항을 묻고 여러 가지 추천의 이유를 설명듣고 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수의 위원들께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그분은 통과가 안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추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이 절차를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원 두 분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절차를 다 밟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 문제에 대한 판단 권한은 본회의에서 오늘 강은희 위원님처럼 개별적인 위원에 대해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임위원 두 분이 안 계신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고요.
- 다만, 이제 심도 있는 아주 충실한 검토를 거치고 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좋다는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현재 상임위원의 상황, 고교학점제를 논의하는 주 부서인 전문위원회 등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큼 절차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 위원장의 그런 절차에 대한 판단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취현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예.
- (연취현 위원) 저도 참여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은 신규 위원님들이 어떠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참여한지 모르는 상태로 보고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전에 참여할 때는 사실 어떻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추천이 된 것인지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의 상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 않고 의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질문드렸던 내용이 사실 그러한

데요. 지금 현재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40명의 구성이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지,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빠져있는지 모른 상태로 저희가 이분들의 명단만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비상임위원으로서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고, 사실은 답변을 받아도 지금 40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그 분야의 보완을 위해서 추가 위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저희 보고서에 딱 한 장 들어 있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임위원으로서 사실 오늘 이 내용이 좀 어렵다, 의결하기가 어려웠다는 그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의 절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이것만 봐서는 어떤 분야가 부족한지에 대한 설명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들 위촉안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상임위원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셨겠지라는 전제로 그다음 논의로 넘어갔다면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향후에는 이 부분이 보완된 상태로 책자가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봅니다.

- (김주성 위원) 마지막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절차에 대한 얘기는 김주성 위원님 발언으로 종료할까 싶습니다.
- (유민봉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검토하자고 하시면 저로서는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장님이 끌고 가시면 저는 판단할 수가 없고요. 다른 하나는 이것을 여기서 오늘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으로 미룰 것이냐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개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의 취지는 위원에 대한 심사를 충분히 하고 싶다면 추천된 다섯 분을 통으로 찬반의견을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의견을 내시고 하셔도 좋다는 그런 뜻으로 위원들의 충실한 논의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 (유민봉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대한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빨리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더 보강해서 신속하게 자문을 받고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신규 위원을 위촉할 때 상임위원이 안 계신 상태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리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리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줘야지요. 사전에 위원들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기준, 다시 말하면 분야의 균형성, 성별의 균형성, 지역의 균형성 등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이렇게 다섯 분을 추가 위촉하려고 한다, 그 다섯 분의 간단한 약력 내지 경력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자료를 제공했다라면 굉장히 이 회의의 진행이 빨랐을 겁니다. 아니면 그런 인적사항들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나 자료를 사전 제공하기 힘들면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그 자료를 딱 앞에 깔아주셨으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었지요. 지금은 각 위원별로 두 줄씩 경력이 있는 이 상황에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전체와의 균형도 보기 힘들고, 이 개별적인 판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 위촉에서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을 선정하는 문제도 일종의 인사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름이 올랐다가 또 탈락한다든지 이런 데에 따른 명예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인사의 문제는 정보 자료를 충분히 관리 가능한 곳에서 논의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정보를 회의 전에 메일로 다 발송한다든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는 사실상

의문입니다. 그 정보는 회의 현장에서 제공하고 여기서의 회의는 전부 신뢰하면서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한 분의 적정성을 놓고도 얼마든지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요.

- 그것은 좋지만 개인정보를 이렇게 널리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는 어떤 균형을 따져볼 때 거기까지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장해 드리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민봉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전문위원 등의 인선에 대해서는 자료를 테이블 위에 충실하게 올려주면 좋겠다,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기를 바라고 약력 같은 것을 충실하게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자주 만나서 의논하실 분들인데 국가교육위원장이 독임제 관청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뭐냐 하면 독임제 관청은 아니지만 기관의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의에서도 절차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받아야만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에 특별히 문제제기를 받지 않는 한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신뢰해서 일을 진행해야 일이 되지 모든 절차 진행까지도 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의 진척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 나갈 것이고요. 특별히 그런 과정에 위원장께서 이런 것을 고쳐주면 좋겠다고 하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 그리고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올라오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람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상임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대립하면 결국 위원장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형식이 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

에 실질적인 논의가 중요하고, 어떤 파당한 논의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상임위원들이 모이는 것도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신뢰의 문제라서 제가 특별히 그런 면에서 신뢰를 잃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걱정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신뢰를 잃을 만한 일을 제가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을 믿지 못하면 일이 힘들고 일이 생산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런 절차는 믿어주셔도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 그다음에 아까 강은희 위원님의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가서 강은희 위원님께서 그 위원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어보시고 하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추가로 다른 후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하시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마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연취현 위원) 절차 관련해서 의견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언론에 공개된 자리라서 이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의견들을 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하고, 저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논의를 할 것이라면 그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는 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예, 그렇게 하지요. 위원님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 (양오봉 위원) 저는 한 분 한 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사실 사무처와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사회적인 요구도 있고 국민적인 요구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도록 통으로 이렇게 해야지 개개인을 하면 이것이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100일 안에 어떤 성과를 내시겠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초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성천 위원) 저도 제가 듣기에는 원래 이것을 할 때 시기를 좀 늦춰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추후에 위원장님이 교체가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을 만들어주자는 것 때문에 아마 한 5명 정도를 남겨 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어쨌든 상임위원이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상황이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쪽으로 해 드리고, 대신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특위라든지 위원회를 그때그때 꾸릴 때 이 안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풀들을 구성해서 저희가 열고, 대신 나중에 상임위원님들이 오시면 그 안에서 뭔가가 정리되거나 아니면 사무처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런 시스템들을 앞으로 만들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 (손덕제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이지만 의결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사명감을 가지고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받고 의결할 때 보면 이때까지는 그러한 사명감이 과연 잘 발휘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 받고 거기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나의 단체와 나의 가치관과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당일에 와서 이렇게 똑딱 똑딱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들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도 저는 우리 차정인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시고 저도 소속된 국가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교육위원회 2기는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받고, 또 고교학점제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단지, 정보 소통에 있어서 만약 이 자리에 '미리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라는 자료가 있다면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안에서는 지난번에 서약서 쓰고 자료를

다 공유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서약서를 쓰고라도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검토가 되고 자료가 넘어온다면 이런 자리가 훨씬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뒤에 있는 안건들도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사실 오늘 올라와서 며칠 전에 이렇게 더 추가가 된다는 이런 案들도 사실 이것이 왜 추가가 될까, 그러면 이것은 왜 나타났을까 하는 어떤 숙의의 과정이 너무 긴급하게 이루어지고 의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찬성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은 앞으로는 조금 바뀌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 논의는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위원 위촉(안) 다섯 분에 대해서 지금 제공된 약력 같은 것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에 대해 궁금한 것은 더 물어보시든 사무처에 질문하시든지 해서 검토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조금 더 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우리 사무처에서 교육과정 논의에 적합한 분들, 그 분포도에 대해 상당히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서 내가 사전정보가 없고 인적으로 추천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추천한 그대로를 안건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 (장신호 위원) 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임기가 25년이 아니라 27년이 맞지요?
- (보고자) 26년 6월 29일,
- (장신호 위원) 26년 6월인가요? 그런데,
- (보고자) 27년입니다. 27년 6월 29일입니다. 저희 오타입니다.
- (장신호 위원) 과장님, 제가 도와드리는 것이 맞지요?
- (보고자)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신호 위원) 그런데 26년이 아니라 27년은 확실한 것인가요?
- (보고자) 예, 맞습니다. 25년 6월 30일에 2기가 시작을 했고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그 임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 (장신호 위원) 그러면 원래 앞서 40명은 25년 6월 30일에 시작 했으면,
- (보고자) 이분들도 27년 6월 29일로 임기 마무리는 같습니다.
- (장신호 위원) 지금 해도 임기는 같다는 것이지요?
- (보고자) 예.
- (손덕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추천해 주신 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 (김주성 위원) 서류는 좋은데 여기서 판단하기는 너무 자신이 없잖아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 (위원장) 어떤 점이 더 필요하십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 우리들이 여기 와서 처음 이야기 듣고 이 사람들을 판단하라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을 신뢰하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를 신뢰하는데 우리가 여태껏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논의된 것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이 없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수렴하고 의결해 주고 할 때 상임위원들이 없이 올라와서 지금 당황스러운데 이 당황스러움을 여기서 지금 판단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판단 못 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하셨던 말씀이 고요.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면 적어도 상임위원들이 11월이면 임명이 될 이야기가 국회에서도 오니까 이것이 27년까지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보고자) 임기는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27년까지 활동하실 분인데 단지 한두 달 때문에 위원장님을 이렇게 곤혹스럽게 해서 되겠느냐,
- (위원장) 그에 대해서 일단 김주성 위원님 말씀은 상임위원님들이 구성될 때까지 그 절차를 거쳐서 안전이 제안될 수 있도록 오늘은 보류하자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예.
- (위원장)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위원들에 대한 찬반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자는 의견이 또 있으신 것이지요?
- (양오봉 위원) 예.
- (위원장) 그러면 그 2개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절차 진행에 대해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의 구성이 바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2월 정도까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가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신뢰할만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위원 구성이 정수가 충족되어 있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 그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의견을 물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토론을 통해서 꼭 설득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민봉 위원) 회의 진행에서 과거에도 이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실시를 했었어요. 물론 위원장님이 언제든지 다수결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案에 대해서 바로 다수결로 들어갈 것인지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은 앞에서 이런 인사 부분에서는 언론 비공개도 어떠한 그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언론 비공개를 지금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부터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어떤

인사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정리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수결을 할 것인지 토론을 계속해서 합의에 이르러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주제의 비중에 비추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금 경과되고 있고 충분히 얘기가 오고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지금 토론을 더 계속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토론을 거친 이후에 김주성 위원님께서 한 번 더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주성 위원님의 의견은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반대 의견, 오늘 논의를 해서 이 안건을 마무리 짓자는 의견이 또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둘을 놓고, 두 번째 의견은 논의를 진행하는데 언론 기자들에게 비공개로 해야 될지도 의견을 물어서 심도 있게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 판단이 들어갈 위험이 있으면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언론 기자들이 계셔도 괜찮을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안, 2안 정도로 지금 여기서 의견을 물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교육과정 전문위원회가 40인이 이미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40인이 논의를 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보니 저는 두 분까지는 검색을 해 봤는데 각각의 전문성은 괜찮은 분들은 맞으신 것 같아요.
- (위원장) 폰으로 검색했습니까?
- (강은희 위원) 예. 검색이 가능한 분들이어서요. 그래서 닐 드림슨 교수님도 교육공학 쪽, 첨단 이런 쪽은 상당히 능력이 있으

신데 우리가 지금 심의해야 될 고교학점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분들이 다시 참여해서 논의를 진행할 만큼의 시급성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분까지는 검색이 되어서 괜찮은 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40명의 전문위원들이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깐 이렇게 급하게까지 다섯 분을 마저 추천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상황에 굳이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 (보고자) 잠시 구성 비율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명 명단을 다 못 드려서,
- (강은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만약에 이것을 정말 통과하고 급했다면 40명 위원들의 각각의 전문분야, 저도 제가 추천한 분도 있고 해서 아는데 다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시급하다면 사실 사무처에서 각각 40명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고교학점제 등 추가적인 전문위원들의 어떤 부분들이, 위원장님께서 45명을 다 구성해서 가시고 싶은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원래 정해진 45명의 위원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빨리 속도를 내서 하시고 싶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전제 안에는 양 상임위원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본 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다섯 분의 전문위원들이 추가로 구성되어야 할 만큼 40명 플러스 다섯 분의 영역에 대한 분석을 사무처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 안건에 올렸어야 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지금 궁금한 점을 사무처에 물어서 해소를 하시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 (강은희 위원) 저도 아까워요. 저도 아깝고, 빨리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흔 분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정보를 사실 저도

안 가지고 있거든요.

- (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시간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과 사무처의 인선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분도 존중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한 분, 한 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제시된 약력만으로 신뢰가 안 되거나 하면 그중에 방금 강은희 위원님처럼 특별히 확인이 필요한, 폰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물어서 그 의문을 해소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보고자)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명단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눠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기에서 45명 구성했던 비율과 바꾼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45명에서 40명을 위촉하면서 위촉하지 못한 분야 고려해서 지금 다섯 분의 案을 드린 겁니다. 즉, 직업교육, 특성화고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이신 분들 중에 지금 두 분이 40명에 위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강은희 위원) 특성화고는 다 빠진 거예요?
- (보고자) 예. 두 분의 인원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일반 쪽으로 해서 수업평가나 또는 교육심리나 공학 쪽으로 해 주실 분이 지금 40명 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큰 틀로는 미래지향이라고 해서 교육과정 전문성은 아니지만 고용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큰 틀에서 봐주실 분도 지금 40명 위원 중에는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다섯 분 案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기와 배정된 인원 배분은 같습니다. 그래서 1기와 구성된 비율에서 40명을 위촉하면서 위촉하지 못했던 다섯 분, 총 영역은 4개 영역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案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지금 간단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천된 영역이 빠져 있으면 아주 논쟁적인 사안을 다뤄

야 되는데 그 설득력이 떨어지고 가령 전문교과 영역에 두 분이 다 빠져있으면 전문교과 쪽에서 무슨 근거로 전문교과에 대한 고교학점제를 논의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영역을 충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느긋하게 늦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 (김성천 위원) 저도 그때 아마 교육과정 위원회 발표되었을 때 사실 직업계고 쪽은 왜 멤버가 없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3번 분들은 들어오는 것이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그때도 보니까 아무래도 교과 쪽이라든지 유·초·중·고가 있다 보니까 현장 선생님들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좀 더 큰 틀 안에서의 교육과정 총론이라든지 방향성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봤었을 때 그렇게 보면 연번으로 봐서 아마 1번, 2번, 4번, 5번, 이런 분들이 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지점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민봉 위원)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사무처에서 깊이 고민하고 숙고하고 검토해서 이 명단이 올라왔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세스가 저희들과 공유 안 된 것,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그 부분이 여기의 배경으로라도 한 페이지로 딱 정리되어 왔으면 저희들이 훨씬 더 공감하고 진행도 빨랐을 거예요. 그것이 전혀 없이 다섯 분의 이름과 두 줄의 경력만 있으니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앞으로의 회의에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인적사항, 개인정보 때문에 메일을 주지 못한다면 상임위원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충분한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상임위원이 임명되어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된다면 여기는 훨씬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진행을 찬성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민봉 위원님 말씀이 경청할 만한 말씀이고요. 사실 상임위원과의 협의 과정보다도 근본적으로 본회의 전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회의 전체에서 논의를 열어둬야지 상임위원들 간에 뭔가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회의를 그르치는 것으로 잘못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공한다면 상임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회의에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무처에서는 이런 자료 제공 같은 것도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더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민봉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절차 진행에는 동의해 주셨는데 김주성 위원님께서 그런 절차 진행을 양해해 주시지 않으면 토론을 계속하는 것은 정말 시간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반의견을 물어서 진행해야 됩니다. 김주성 위원님, 혹시 어떻습니까?
- (김주성 위원) 진행을 하시려면 진행하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판단은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기권하시겠습니까?
- (김주성 위원) 예, 기권하겠습니다.
-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절차 진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절차를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추천된 다섯 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정보를 요청할 것이 있으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강은희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여기가 공개라서 그렇기는 한데,
- (위원장) 위원님, 혹시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요소가 있으면,

- (강은희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이주연 위원이 수업평가 전문위원이라고 했는데 이력을 보면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에 근무한 경력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분이 현재는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인데 제가 찾아보니깐 이분이 수업평가 전문가라는 것을 찾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 이력이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에 근무를 하셨다면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이분은 수업평가 전문가로 추천한 이유가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 (보고자)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국가교육과정연구센터에서도 팀장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지금 아마 전 이력은 평가원 근무 전에 있었던 이력이 이 이력이라서 제시가 된 것이지 전문성의 부분은 교육과정과 수업평가 영역이 맞습니다.
- (강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고 차라리 그것을 적어줘야지요.
- (김성천 위원) 이주연 박사님은 연구보고서를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평가원에 제시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했느냐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학교혁신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고교학점제에 대한 연구들이나 성취수준 개발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말 그대로 교육과정이나 수업이나 평가나 고교학점제나 성취평가제, 역량 이런 쪽, 또 교과별로도 연구를 많이 하셨던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폭력 쪽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수업평가 쪽으로 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제가 검색을 다 해 봤습니다.
- (연취현 위원) 저희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논의를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찬반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보면 신뢰가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 (위원장) 웬만하면 오늘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 강은희 위원님, 김성천 위원님 말씀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문성이 있다는데요.
- (강은희 위원) 지난번에도 저는 계속 이런 부분들은 불만이었거든요. 조금 더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어야 위원들이 동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수업평가 전문가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이력을 적어주는 것이 사실은 위원들한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 (위원장) 수업평가 이력으로 삼을만한 것이 있는데 안 적은 상황 아닙니까?
- (보고자) 여기가 지금 어떤 연구경력을 쓰는 부분이 아니었고,
- (김성천 위원) 보니까 IB 프로그램도 연구하셨네요.
- (강은희 위원) 김성천 위원께서 추천하신 모양인데...
- (웃 음)
- (김성천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 (위원장)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당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 (강은희 위원) 직업계는 사실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만약에 의뢰를 했으면 직업계를 상당히 오랫동안 한 저희 현장 전문가들도 꽤 있는데 직업계 부분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추천 신규 위원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강은희 위원) 직업계고를 다른 분으로 한 분 추천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 (강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추천을,
- (위원장) 지금 추천해 보시겠습니까?
- (강은희 위원) 제가 지금 저희 대구의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있는 유병원 교장선생님이 정말 평생 직업계만 했고 직업계 고등학교의 진로, 취업, 그다음에 교과 구성,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가이고, 경력도 지금 추천된 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직업계고가 어떻게 가야 될지 교육과정에서부터 모든 전반에 이르는 경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매우 자신감 있게 추천할 수 있는 분입니다.
- (위원장) 전적으로 지금은 위원님의 추천을 믿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강은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김성천 위원님은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저는,
- (위원장)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내가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때 안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 (강은희 위원)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교감선생님보다는 교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경력도 훨씬 많으시고, 그리고 반도체마이스터고도 설립해 보고, 저희 교육청에서 장학진으로도 있었고 또 오랫동안 직업계만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추구하시는 교육 철학에도 전혀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성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직업계고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도 매우 잘 세팅이 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그러면 유민봉 위원님 말씀 듣고 이 상황에서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 (유민봉 위원) 위원 위촉이 준비된 분에서 새로운 분으로 이렇게 위촉한 경우는 저희들 또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지요.

(웃 음)

그리고 그것은 선례로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공신력은 어쨌든 사무처에서 이 자료를 준비해서 프린트되어 온 이 상태에서 어떤 분의 경우에는 'No'는 하더라도 이분을 다른 분으로 대체하는 것까지는 과하다, 이렇게,

- (강은희 위원) 예, 그것은 저도 좀 과한 것 같습니다.
- (양오봉 위원) 저도 유민봉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강은희 위원) 저도 그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의 열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그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정보를 알았다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 (강은희 위원)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입니다.
- (위원장) pool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 (강은희 위원) 예, 잘 넣어주십시오.
- (위원장) 그러면 주문서 좀 가져다주시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긴 시간 얘기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분을 결국 원안대로 위촉안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 현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주성 위원님은 기권을 하셨고요. 그러면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추가 위촉에 대하여 안건과 같이 의결한다.

(의 사 봉 3 타)

- 그다음에 특위 구성 부분에 대해서 간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심의·의결안건) 2025년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현황 및 추가 구성 분야(안)

- (간사) 간략하게 다음 3호 안건인 2025년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 및 추가 구성 분야(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자) 안건자료집 50쪽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 가운데 보시면 지난번에 고교교육, 대학입학제도,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인재강국, 5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심의·의결해 주셨습니다. 이 중 ‘지역대학 특별위원회’ 명칭을 ‘고등교육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약간의 수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분야를 심의·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시행령 19조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별 위원장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별 위원장 지명은 불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심의·의결안건으로 추가 올린 것은 52쪽 네 가지 특별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AI시대 교육입니다.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여 지식·인성·감성이 균형 잡힌 인재들을 양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입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회복을 통해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입니다. 공동체 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함양하는 토론교육·헌법교육·생태교육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인문사회 특별위원회입니다.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예술 감수성,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지속가능한 인문사회 학문 분야 진흥과 학술생태계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 특별위원회를 추가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의결안건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방금 간사가 보고한 것처럼 오늘 안건에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새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높으신 분들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고자 했고, 대학입학제도는 제가 좀 시간을 더 많이 내어서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더 꼼꼼하게 챙겨나가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또 지난 의결 이후에 더 다양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특별위원회 구성 분야(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추가로 포함되는 내용은 AI시대 교육, 학교공동체 회복, 민주시민교육, 인문사회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된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아까 교육과정 전문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교교육의 고교학점제와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면 두 위원회 간에 충돌은 없는가요?
- (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고교학점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찬반양론이 굉장히 격렬하게 대립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 등을 다 갖춰야만 제대로 알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긴급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다른 고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긴급하게 구성해서 고교교육 특위를 가동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2개의 충돌 문제를 말씀하셨지요.
- (강은희 위원) 거기서 논의하는 것과 고교교육, 대학입학제도가 사실은 위원회가 따로 돌아가는 것도 좀,
- (위원장)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데 고교교육 특위에서는 일단 고교학점제를 다루고요. 대학입학제도는 관련성은 있지만 일단 직접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 주로 교과과정 전문위원회와 고교교육 특위, 2개를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교과과정 전문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보다 고교학점제에 더 전문성이 높은 분들을 통해서 논의를 좀 더 밀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두 논의가 일치하면 매우 좋고요. 또는 더 좋은 의견이 어디에서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위든 전문위원회든 우리 국교위 법안에 따르면 사전검토와 자문 역할입니다. 사전검토와 자문 역할이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달라도 괜찮습니다. 달라도 괜찮고, 경청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오면 논의를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어떤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의견이 상충될 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연취현 위원) 저는 새로 구성되는 추가 구성 분야와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부분과 관련된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이 내용은 토론교육, 헌법교육, 생태교육 등인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느덧 약간 정쟁의 대상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실제 언론이나 얼마 전에도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이런 성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은 정쟁으로부터는 벗어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헌법교육을 하고 특히 아이들에게 준법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공동체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용어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찬반의 논의로 빠져들 수 있다면 좀 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같은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조금 더 교육의 방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각을 바꿔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려합니다.
- (김성천 위원)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미 우리 교육기본법상에서도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들이 우리 기본 교육목표로 나와 있고, 교육과정 총론 상에서도 이미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원, 사대 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들을 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이들의 깨어 있는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가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개념이어서 용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가치가 정쟁의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잘 가꿔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는 필요한 주제이고 반드시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주성 위원) 민주시민교육 이 문제는 제가 전공 분야인데 저한테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민주주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만이 아니고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세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는 정치체제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1차대전 하면서 월슨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고 하면서 ‘민주주의’라는 말로 통일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쟁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요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개념이 사상이 되고, 민주주의 하나만으로 지금 교과서들이 주로 많이 되어서 국민들이 자기 뜻을 표현하는 것만, 참여하는 것만 강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정쟁이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그쪽으로 방향이 다 잡혀서 균형감을 잃을까 봐, 그래서 나오는 지금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좀 더 우리한테 지금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민주’라는 말을 자꾸 앞세우는 것보다는 뭔가 중립적인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현대정치를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느냐, 특히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는 중립적인 용어를 좀 더 구상할 수 있으면 구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성천 위원) 그런데 저는 민주시민교육 개념 안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민주주의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실제 이 안에 생태교육이라든지 리터러시라든지 헌법

이런 것들이 그냥 개인의 자유만을 막 무한정 주장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견제와 균형이라든지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만 가서는 안 되고 삶의 실천 영역으로, 문화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어서 저는 이 개념이 이렇게 오염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다른 분들 의견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오봉 위원) 하여튼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회에서 논의한 것 같은데 ‘시민교육’만 해도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시민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민주’를 넣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정쟁의 요소가 있으면 ‘시민교육’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옛날에 한번 이것을 논의한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시민교육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
- (강은희 위원) 원래 교육기본법에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 교육청도 민주시민교육을 분명하게 지향을 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우리 국교위에서 고민을 한다면 책임과 의무라는 조항이 어찌 보면 조금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민주시민을 육성하려면 권리와 책임, 의무가 같이, 특히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는 그런 의식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축소되다 보니까 권리 주장이 과도하게 아이들에게 또 심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시대적으로 책임과 의무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 민주시민교육은 기본법에도 들어있는 조항이라서 그대로 진행하되 이것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도 좀 상기시키는 부분도

위원회에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태고 싶습니다.

- (위원장) 다른 위원님,
- (연취현 위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 가급적 발언 안 한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니까,
- (연취현 위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용어가 교육 기본법에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저는 민주시민교육 책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취지입니다. 그 교육 내용을 보면 사실 모든 국가의 사회 가치에 대해서 토론이 가능한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책임과 의무 부분이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이것을 교육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 용어가 주는 가치가 이미 약간 굳어진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보다는 권리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위주로 용어가 굳어졌다면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용어의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는 취지로, 아까 김성천 위원님도 생각하셨듯이 용어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안 되나 어떤 교육을 시행하는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취지를 말씀드린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발언 안 하신 김 건 위원님.
- (김건 위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추가 특위 같은 경우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기존 5개 특위와 동시에 출범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순차적으로 준비되는 대로 빠른 속도로 할 겁니다.
- (김건 위원) 그러면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다면 9개 특위가 한꺼번에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 (위원장) 동시에 돌아가는 것이지요.
- (김건 위원) 그 9개 특위가 운영될 여력이 현실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있습니까?

- (위원장) 가능합니다. 그것을 해 내야지요. 사무처가 굉장히 바쁘는데 해내야지요. 우선은 지금 실무 일손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일손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교육난제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그렇다고 일손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서 우선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파견을 요청해 놓고 있고요. 파견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호 위원님.
- (장신호 위원) 아까 양오봉 총장님 말씀에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교육과정에 보면 사실 이것이 정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은 일단 떠나서 교육과정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이 초·중·고 교육과정 총론에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대목표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시민’이라는 그 용어가 교육과정에는 쓰여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교대와 사범대, 교육에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아예 강조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실 고민사항은 있지만 교육과정에 있고 저희 선생님을 기르는 교대와 사범대에는 이미 ‘민주시민’이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 써서 강조하고 교육과정이 같이 이렇게 일관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유민봉 위원님,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 (유민봉 위원) 예.
- (위원장) 발언 안 하신 분이 위원님 혼자이십니다.
- (유민봉 위원) 예,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이 정쟁적인

요소가 있는 이름이 되었다는 연취현 위원님의 말씀에 그런 현실이 일부 있다고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 자체를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 자체를 굉장히 걱정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법에서 쓰고 있는 확립된 명칭이기 때문에 이름에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한데 공화와 자유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헌법에 다 있는 핵심가치 중의 하나인데 말하자면 이 공화, 자유, 민주 등등의 큰 이름들 중에서 지금 대표선수가 민주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민주'라는 이름 속에 공화와 자유를 가르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를 부정하거나 그런 인식이 충실하지 않다면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주'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데는 이론상으로나 법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나 문제는 없다는 것이고요.

- 다만, 내용에 우리 사회의 그런 극심한 이념 대립 성향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교육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큰 과제 중의 하나가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은 굉장히 설계를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될 것이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는 것은 지금 아주 핵심적인 가치이고요.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탠다면 진실의 충성심을 가르치면 좋겠어요. 진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사상누각이다, 그래서 토론교육도 저는 상당히 잘했으면 좋겠는데 토론교육에서의 핵심은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 팩트에 근거한 토론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고, 그것만 배우고 나가도 제대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치들이 다 이 민주시민교육 속에서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명칭은 그냥 '민주시민교육'

으로 가고, 다만, 거기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혜를 구하면서 내용을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성 위원) 한 마디만 좀 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 (김주성 위원)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한 곳으로 이렇게 독립시키는 것이 사실은 마음에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학교 전체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거기에 국어도 필요하고, 영어도 필요하고, 역사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인데 이 민주라는 것을 하나로 독립시킴으로 해서 어찌 보면 우리 학교 교육 전체가 정쟁화가 되거나 그런 바람을 타게 된 느낌이 없지 않아서 그런 느낌을 우리 위원장님도 함께 가지시고, 이왕 구상을 하셨으니까 끌고 가시더라도 그런 전체적인, 우리의 교육이 사실 전체의 목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명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큰 문제는 없고, 또 그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AI시대 교육과 학교공동체 회복은 사실 굉장히 시급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할 방향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부분은 지금 과학기술, 특히 AI시대 등등이 워낙 강조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인문사회 연구 분야가 뭔가 좀 위축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고, 정책이나 국가의 자원 배분에서도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도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학문 분야입니다. 우리가 1~2년만 살 것이 아니라 평생 학문을 후속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기존 인문사회 분야가 위축되거나 해서는 안 되

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학문 생태계를 중심에 둔 그런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4개의 특위를 일단 발족하는 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통과를 할까 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2025년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 및 추가 구성 분야에 대하여 안전과 같이 의결한다.

(의 사 봉 3 타)

⑥ 차기 회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 제62차 회의는 11월 5일 개최
- 제63차 회의는 12월 11일 개최 예정

⑦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6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정중하게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의 사 봉 3 타)

(일 동 박 수)